

간호법 파동, 의사·간호사·조무사 모두 패배자

태평로



김민철
논설위원

간호법 파동에서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들은 무엇을 얻고 잃었을까. 세 직업(職域) 모두 1년 넘게 간호법 제정과 저지에 모든 힘을 쏟아 기진맥진한 모습이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지 금 따져보면 세 직업 모두 패배자다.

먼저 간호협회는 원하는 간호법 제정이 무산 위기에 처했다. 가장 큰 원인은 왜 이 법이 필요한지 국민을 설득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일 것이다. 지금 국민들은 왜 의료법에서 간호법을 분리해야 하는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간호협회는 법 제정 촉구 집회에서 '간호법은 부모돌봄법'이라고 했다. 그러나 법안이 왜 부모돌봄법인지 납득하기가 쉽지 않다. 의사들은 간호사들이 독자 개업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의심했다. 이 법안으로는 간호사 단독 개업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단독 개업할 수 있게' 개정하는 건 정말 쉬운 일(의사 출신인 신현영 의원·민주당)이라는 주장이 의사를 정서를 대변하는 것 같다.

간호사들이 지역사회에서 독자적인 역할을 하겠다던 것이 어떤 수준이며 국민들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분명하게 설명했으면 어땠을까. 고령화로 의료 수요는 늘고 의사들이 다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간호사 역할이 늘어나는 것은 필요하고 불가피한 일이다. 이 때문에 간호사들이 법 제정 필요성을 솔직하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으면 더 나은 결과를 얻었을 가능성이 높다.

의사협회는 간호법 거부권을 유도하는 데 성공했지만 일선 의사들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의사면허 취소법을 더 걱정하고 있다고 한다. 간호법 저지에 힘을 집중하느라 의사면허 취소법을 놓친 것이다. 현행 의료법은 진단

간협, 별도법 필요 설득에 실패 의협은 의사면허 취소법 못 막아 조무사들 전문대 허용 놓고 내분 60년 묵은 직업 역할 재조정해야

서 허위 발급, 업무상 비밀 누설 등 의료 관련 위반자만 면허를 취소하지만 개정 법은 다른 법을 위반해도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보다 더 큰 손실은 자신들이 다 할 수 없는 것이 분명

수 있으니 이걸 학력 제한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실질적인 요구는 전문대에 간호조무학과 개설을 허용해달라는 것인데, 복지부는 개선을 약속했다. 그러나 간호조무사를 양성하는 특성화고와 간호학원 등은 '특성화고와 학원이 고사 위기에 빠질 것'이라고 강력 반대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간호법에 대한 국회 재투표는 빠르면 이번 주 이루어질 전망이다. 재의결은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 통과 가능성이 높지 않다.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 결과에 관계없이 꼭 필요한 것이 있다. 현행 의료법에서 직업별 업무 범위는 1962년 법 제정 이후 거의 그대로다. 달라진 의료 현실에 맞게 각 직업 역할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를 겪은 일본의 경우, 지역마다 방문 간호센터가 있어 간호사가 집집마다 방문해 노인을 케어하는 시스템을 정착시켰다. 이미 1만여 개의 방문간호센터가 활동 중이다. 의사가 만성·경증 재택 환자까지 다 진료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필요한 제도다. 의료 현장에서 의사 부족을 매워주고 있는 진료보조(PA) 간호사 등 역할도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 보건 의료의 중심은 당연히 의사들이다. 각 보건의료 직업 역할을 재조정하는 데 의료계의 맞춤형 의사들이 합리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김준의 맛과 섬 [139]

신안 간재미찜

“여기 선창에서 주낙을 당기면 간재미가 졸졸이 올라왔죠. 그때는 멀리 나갈 것도 없었어라.” 오랜만에 고향을 찾은 최씨가 어렸을 때 기억을 들려줬다. 신안군 비금도와 도초도 사이의 ‘불섬’이라는 곳이다. 지금은 도초도 큰 섬과 이어졌다. 맑은편은 비금도로 파시(彼市·바다 위에서 열리는 해상시장)촌이 형성될 만큼 어장이 활발했던 송치라고 부르는 어촌이었다.

두 마을 사이의 바다로는 흑산도와 흥도를 오가는 쾌속선이 지나간다. 흑산도로 유배된 뒤 ‘자산어보’를 쓴 손암 정약전도 이 길을 통했었다. 두 섬 사이를 빠져나가면 칠발도어장이 펼쳐진다. 서남해를 대표하는 어장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 일대가 봄철이면 간재미가 많이 잡히는 대표적인 곳이다.

그 너머 서쪽으로는 흥어 어장이 형성되는 흑산어장이 있다. 도감에는 흑산 흥어는 참돔어, 간재미는 흥어로 소개되어 있다. 간재미는 신안 외에 진도 청룡리, 당진 성구미 등이 유명하다. 모두 바다 밑에 모래가 섞인 갯벌이 발달하고 새우 등이 많이 서식하는 곳이다. 진도 지역 어민들은 생새우를 미끼로 간재미를 잡기도 한다.

이번에 맛본 간재미는 비금도산이다. 비금도는 신안군에서 처음으로 천일염전을 시작했던 곳이다. 그곳 원평포구에서 가져온 것이다. 원평은 황석어 파시가 형성된 곳으로 일제강점기에는 정어리를 이용해 어유(魚油)를 만들기도 했다. 포구 북쪽으로 칠산바다가 이어진다. 간재미를 생물로 가져왔지만 하룻밤을 지낸 탓에 회보다 찜을 선택했다.



생물로 조리한 탕은 시원하고 개운해 소주 안주로 좋다. 하지만 깔끔한 막걸리 반주로는 찜이 어울린다. 조리도 매우 간단하다. 깨끗하게 씻은 후 물기를 제거하고, 솔에 물을 조금 넣고 찜 위에 올려둔다. 이제 찜기만 하면 된다. 그사이 고흥 뒷밭에서 캐온 달래와 간장, 깨소금, 참기름으로 달래장을 만들었다. 봄이 무르익어가는 계절에 달래장과 간재미는 궁합이 잘 맞는다. 양념을 올려서 찜 수도 있지만 익히는 과정에서 흘러내리기에 피했다. 6월이 지나면 간재미를 통째로 썰 먹는 것은 조심스럽다. 뼈가 여석진다.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원

社 說

“징용 배상금 20% 떼 달라”, ‘과거사 브로커’ 이들뿐인가

일제 징용 피해자 지원 단체가 피해자들에게 배상금 등의 20%를 내게 하는 약정을 제시해 체결했던 사실이 알려졌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 모임’은 2012년 미쓰비시 중공업 피해자 5명과 어떤 형태로든 돈을 받으면 20%는 단체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맺었다고 한다. 피해자가 아닌 수입인들이 먼저 돈을 받고 그다음 약속한 돈을 이 단체에 지급하도록 했다. 원천징수와 같은 것이다. 지난 3월 정부의 제3차 변제안에 따라 피해자가 판결금을 받자 실제로 이 약정을 이행하려는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도 드러났다. 이들은 돈을 일제 피해자 인권 지원 사업, 기념 사업 등에 사용한다고 했으나 애초에 이렇게 강제할 일이 아니다. 자정 시민 단체들이 그동안 숏한 논란을 일으켜왔지만, 이렇게 내놓고 ‘과거사 브로커’ 같은 행태를 벌이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겉으로는 연료한 피해자들을 돕는 척하면서 뒤로는 잇속을 챙기고 있었다.

지식 없고 힘 없는 피해자들은 이들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시민 단체라는 탈을 쓴 사람들이 젊은 시절 징용으로 고초를 겪은 피해자들에게 돈을 모아서 돕지는 못할망정, 이들로부터 돈을 뜯어내다니 양심이 있느냐고 묻지 않을 수 없다.

선관위 ‘자녀 특혜 채용’ 의혹도, 독립성 주장할 자격 있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3일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특별 감사를 실시하고 5급 이상 직원의 자녀 채용 사례를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전·현 사무총장, 사무차장, 지방선관위 상임위원 자녀를 경력직으로 채용하는 과정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전·현 사무총장은 자기 자녀 채용 시 최종 결정권자이기도 했다. 공무원은 4촌 이내 친족 채용 시 보고하게 돼 있지만 아마저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임을 내세워 관련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거부해왔다. 뒤늦게 외부인이 참여하는 특별 감사를 한다고 하지만 이 역시 선관위 내부 감사에 속한다. 진상을 규명하려면 강제 조사권을 가진 수사기관이 나서야 수밖에 없다.

선관위는 북한의 사이버 공격 7건 중 6건은 인지 자체를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이 해킹 사실을 통보했지만 선관위는 통보받은 적 없다고 했다.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국정원 보안 점검도 거부했다가 뒤늦게 수용하겠다고 했다.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커지자 마지못해 수용한 것이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헌법상 독립기관이란 것을 내세워 울타리를 치고 자기들만의 편한 아성을 만든 것 아닌가. 만일 선관위가

이 단체는 2009년 만들어진 후 징용 문제를 공론화하고 피해자들의 소송을 지원해 왔다. 상대가 있는 문제인데도 어떤 절충안도 거부했다. 내세운 명분은 그럴듯하지만 실제로는 한일 간 과거사 해결을 방해하는 역할을 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단체를 보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돌본다고 하면서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미향 의원 사건을 떠올리게 된다. 일제강점기 피해자들을 돕는다는 명분으로 한일 과거사 해결을 가로막고 그 뒤에선 돈을 챙겨왔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 단체는 문제의 약정을 통해서 피해자들이 이탈하지 않도록 관리하면서 강경 대응하도록 부추겼을 가능성이 있다. 이 단체는 최근 피해자 한 명이 정부의 제3차 변제안을 수용할 것으로 알려지자, 이를 만류하는 취지의 편지를 보냈다고 한다. 이들의 진짜 목적은 한일 간 과거사 해결을 막는 것 아닌가. 문제의 전 정부와 이들 단체는 그동안 징용, 위안부 문제에서 ‘피해자 중심주의’를 강조해왔는데 정말로 피해자를 위한다면 이들이 자유 의사에 따라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한일 간 문제엔 일본의 진심 부족도 있지만 피해자들을 돕는다는 명분으로 실제로는 문제 해결을 방해하는 이런 단체들의 존재도 악영향을 미쳐 왔다. 그런 이면이 이제야 드러나고 있다.



가짜 뉴스 넘치는데, AI 발 가짜 뉴스까지

미국 국방부 청사 인근에 대형 폭발이 발생해 검은 연기가 치솟는 사진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급속히 퍼지면서 미국 주식시장이 출렁이고 금·국채 가격이 오르는 등의 혼란이 빚어졌다. 백악관이 화재에 휩싸인 이미지도 유포돼 9·11 사태와 같은 대규모 테러가 벌어진 것 아니냐는 공포가 확산됐다. 알고 보니 AI(인공지능)가 만든 가짜 뉴스였다. 금세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지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챗GPT 같은 생성 AI는 사실 여부에 상관없이 그럴듯한 문장을 만들어낸다. AI가 만든 가짜 뉴스를 또 다른 AI가 학습해 더 그럴듯하게 가짜 뉴스를 만들어낼 수 있다. 사용자 개개인의 취향에 따라 1대1 맞춤형으로 허위 정보를 생성할 수도 있다. 가짜 뉴스를 확대 재생산할 수 있어 훨씬 심각한 여론 조작이 우려된다.

내년에 대선과 총선을 앞둔 미국과 영국 등에서는 생성 AI가 만들어낸 가짜 뉴스와 여론 조작의 위험성을 계속 경고하고 있다. 그렇다고 AI 이용 자체를 막을 수도 없다. 최근 유럽연합(EU)은 무분별한 AI 사용을 규제하는 지침 초안을 발표했다. 국내에서도 해당 콘텐츠가 AI를 이용해 제작됐다는 사실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 등이 발의돼 있다.

이런 규제만으로 AI발 가짜 뉴스를 통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AI의 기술 진보가 너무 빠르기 때문이다. 광우병·사드 괴담을 비롯해 온갖 허위 선동이 꼬리 무는 한국 사회는 안 그래도 가짜 뉴스에 취약한 체질이다. 여기에 AI 기술을 활용한 정교한 가짜 뉴스까지 일상화되면 진실이 뒤덮이고 허구가 판칠 위험이 있다. 지금부터 대비해야 한다.

뉴데일리 newdaily.co.kr

윤 대통령의 G7외교, 문재인이 북·중·러로 끌고간 나라 되찾았다

**국내선 여전히 친중·중북 세력 위협 거세
국제외교서 대통령 혼자 애써도
국내 총선서 지면 게임 끝.
야,尹 외교를 '과공외교'라 비난...
그럼 중공서 혼밥 먹은 文 외교는 '고독한 외교'?**

■ 우리에게 북·중·러는 무엇?
〈히로시마 G7 정상 회의 2023〉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다자회의와 양자 회담을 잇달아 가졌다. 이 다변적 만남을 거쳐, 윤석열 대통령은 극좌 운동권이 해체한 ▲자유민주적 공유가치와 ▲국제 자유연대를 급속히 복원하고 업그레이드했다. '윤석열 외교'는 한국을 글로벌 중추 국가 지위로 높이는 데도 성공했다. 이런 노력은 한국을 '북·중·러 아시아 전체주의권(圍)'으로 끌고 간 문재인 5년의 추세를 역전시켜, 이를 다시 '인도 태평양 자유 블록'으로 되돌려 놓는 작업이었다.

■ G7회의가 우리에게 던져준 의미
〈히로시마 G7 정상 회의 2023〉에 참석한 국가들과 국제기구들은,
◎ 규범에 기초한 국제질서를 재확인하고,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배척했다. ◎ 푸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시진핑 중공의 대만 해협 침공 위협 ▲북한의 핵·미사일 발진 ▲자유롭고 개방된 남중국해-인도 태평양에 대한 도전에 응전했다.
◎ 자유 국가들 사이의 견고한 공급망을 확보하고, 반(反)시장적·강제적 경제 정책과 관행을 배척했다.
◎ ▲에너지 안보 ▲식량안보 ▲지속 가능한 발전(SD, sustainable development) ▲재난에 대한 인도적 지원 ▲기후변화에 대한 대처 ▲보건 수준 향상에 협력하기로 했다.

◎ 한국의 기준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한·미·일 3국 정상들이 또한 차례 만났다는 점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다시 워싱턴을 방문해 줄 것을 요망했다. ▲북한 미사일 경보 실시간 공유 ▲인도 태평양 전략 공조를 구체화하자는 것이다.

■ 국제 정세와 담쌓고 사는 국내 정치
이 일련의 국제정치를 지켜보며 새삼스레 절감되는 게 있다. 한국 국내 상황은,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성과와는 너무나 반대 방향으로 치닫고 있다는 사실이다.
국제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과 자유 국민이 '북·중·러 전체주의'에 일대 공세를 펴고 있다. 그러나 국내적으로는 ▲북·중·러의 동맹군 ▲전체주의 운동권들이 훨씬 더 막강하다.
이들은 윤석열 외교를 ▲'기시다 참모 노릇' ▲'과공(過恭) 외교'라 폄하한다. 그럼, 윤석열 대통령에게 빠르게 쫓아가 인사한 바이든 외교는 뭐라 할 것인가? '과·과공 외교'? 중국에서 '혼밥' 먹고 온 문재인 외교는 '고독한 외교'?

NL 운동권들은, 한·미·일 공조의 한 축인 한일 협력을 깨는 데만 온 힘을 쏟아붓는다. "죽창을 들어라"다. 2024년 총선에서 자유 진영이 승리하지 못하면, [백

무장한 북한 + 한국 내 북한 간첩망 + 주사파 운동권 + 좌파 통일전선의 대한민국 해체 공작은 급속도로 진척될 것이다. 이를 방지할 것인가?

■ 어떻게 해야 하나
방임할 수 없다면, 자유인들은 어찌해야 하는가?
◎ 자유 진영과 좌파 아닌 사람들이 자유를 위한 국내 정치 투쟁의 생사가 걸린 중요성을 깨달아야 한다. 이런 각성 없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제무대에서 아무리 혼자 애쓰든, 오래 지탱할 수 없다.
◎ 국민의힘 일부의 기회주의와 소속 의원들의 안일함으로는, ▲저 막가는 운동권들의 악착스러운 반역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마키아벨리즘 ▲거짓 선전 선동을 이겨낼 수 없다. 어떤 긴급한 조치로든, 용맹스럽고 매력적으로 싸움 줄 아는 '명팀'을 짜야만 한다.

국제정치에서 발휘한 에너지를 국내 정치 투쟁의 승기(勝機)로 전위(轉位)시킬 때다. 자유 레지스탕스를 위하여!

류근일
뉴데일리 논설위원 / 전 조선일보 주필

이 기사는 인터넷신문 뉴데일리(www.newdaily.co.kr) 칼럼으로 5월 22일 게재 되었습니다.